

## 공적개발원조를 향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분석: 불평등, 공정성,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은미(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후 연구원)\*\*

변지영(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정헌주(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논문요약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연계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맥락에서 불평등 인식, 공정성 인식,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ODA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2023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ODA 증액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ODA 공여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필요에 기반한 분배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ODA 공여 및 증액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인식과 ODA 공여 및 증액 태도 사이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한국의 수원 인식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평등 인식과 ODA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ODA 지지와 연관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기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공적개발원조, ODA, 국제개발협력, 원조태도, 원조인식, 불평등, 공정성, 정부역할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22S1A5C2A02093658).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 참여저자

\*\*\*\* 교신저자



## I. 서론

2023년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약 4조 5천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난 2023년 6월 3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24년 2천여 개의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약 6조 8천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2023년 대비 43% 이상이 증가한 규모이다.<sup>1)</sup> 지난 2014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약 2조 2천7백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증가는 다른 어떤 예산 항목에 비해서 그 증가폭이 크다.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여국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공적개발원조가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이 공여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의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적 자금이 해외로 이전되는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그에 정비례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힘든 ODA 사업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납세자들은 ODA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공여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증가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선진 공여국은 1980년대 경기침체 상황에서 원조 피로(aid fatigue) 현상을 경험하였다.<sup>2)</sup>

한국 역시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감소하고 있다. 2010년 한국이 DAC에 가입한 직후인 2011년 공적개발원조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은 89%였지만, 동 비

1) 관계부처 합동,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요구액 기준].”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년 6월.

2) Hewitt, Adrian, “Beyond Poverty? The New UK Policy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Globalisation [Review of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lobalisation Work for the Poor.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22, No. 2, 2001, pp. 291~296.

율은 2016년 80%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는 76%로 더욱 감소하였다. 반면 반대 의견의 비율은 동기간 11%, 20%, 2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sup>3)</sup> 이러한 원조에 대한 태도 변화는 빠르게 증가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적개발원조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어떤 개인은 찬성하고, 다른 개인은 반대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수준에서 한국인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개인 태도를 살펴본 기존 연구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종교 유무, 정치적 성향, 빈곤 인식, 정부 신뢰, 국제사회 관심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sup>4)</sup>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2020년 이전의 연구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등 세계사적 변화와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개인의 원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개인의 객관적 소득수준에 따른 원조 지지 여부를 분석하였지만, 불평등과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원조 지지와의 관계는 살펴보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경제 상황, 특히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악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심화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원조에 대한 개인의 태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한다.<sup>5)</sup> 또한,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이로 인한 소득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정부의 역할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역시 높아졌다는 점

3) 이동열 외, 『2021 ODA 국민인식 조사』, 국무조정실, 2021.

4) 박복영 외, “한국인의 해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경제발전연구』 제21권 3호, 2015, pp. 29~56; 구정우 외,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민태도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52권 2호, 2018, pp. 115~158; 김동훈·윤준영, “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2호, 2019, pp. 3~26.

5) 송상윤,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제 2021-9호, 2021.

역시 원조 태도와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원조 태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23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한 개인의 경우, ODA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조에 대한 태도를 ODA 공여 자체와 ODA 증액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불평등 인식은 ODA 증액 지지와 부정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필요에 따른 분배 공정성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ODA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경제적 불평등 완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ODA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불평등 심화, 공정성에 대한 인식 강화, 정부 역할에 대한 높아진 기대라는 한국적 맥락에서 다양한 국내문제 해결에 사용될 재원이 국외로 이전된다는 부정적 인식 확대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개인적 태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원조 정책 형성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 원조 태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제3장은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연구자료와 변수의 측정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연구설계이다.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공여국이 제공하는 ODA 규모가 증가하면서,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원조 결정요인을 다양한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 수준(state level)—공여국과 수원국의 특징—이나 국가 간 관계(inter-state level), 혹은 국제사회(systemic level)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sup>6)</sup> 반면,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ODA가 배분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견이 원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ODA 정책에 대한 책무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sup>8)</sup>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수의 연구가 개인적 수준에서 원조에 대한 지지가 궁극적으로는 원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원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sup>9)</sup>

대표적으로 Chong·Gradstein과 Paxton·Knack의 연구는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이 원조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sup>10)</sup> 먼저 Chong·Gradstein은 공여국의 원

6) McKinlay, Robert D. and Richard, Little, "A foreign policy model of US bilateral aid allocation." *World Politics*, Vol. 30, No. 1, 1977, pp. 58~86; Maizels, Alfred and Machiko K., Nissanke, "Motivations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12, No. 9, 1984, pp. 879~900; 정현주 외, "지역체제 수준에서의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학논총』 제35권, 2022, pp. 153~190.

7) 이재완, "우리 국민들의 대외원조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정책 인지도와 정책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3호, 2019, pp. 131~152.

8) 김은미,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전략."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Vol. 6, No. 1, 2011, pp. 97~112.

9) Milner, Helen V. and Tingley Dustin, "Public opinion and foreign aid: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9, No. 3, 2013, pp. 389~401.

10) Chong, Alberto and Gradstein Mark,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7, No. 1, 2008, pp. 1~13; Paxton, Pamela and Knack Stephen, "Individual and country-level factors affecting support for foreign aid."

조가 통상 공여국 경제 규모의 1%를 넘기지 않는 미미한 규모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근본적인 선호, 이념,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sup>11)</sup> 따라서 원조의 국별 배분 결정요인 또는 원조의 효과성에 주목하던 기존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원조 정책에 대한 공여국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여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소득수준 등을 다루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개인의 높은 소득수준, 진보적 정치 성향이 원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axton·Knack은 *World Values Survey*와 갤럽의 *Voice of the People 2002*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적 수준과 국가 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분석수준 모델을 구축해 개인의 원조 태도를 분석하였다.<sup>12)</sup> 그 결과, 개인적 수준에서는 종교성, 빈곤의 원인에 대한 믿음, 국제문제에 대한 인지,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개인이 원조에 갖는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ner·Tingley는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연구가 무역, 국제 이주 등 다른 대외 정책 영역에 관한 연구에 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는 상당히 일관되며 구조화되어 있음을 지적했다.<sup>13)</sup> 이를 원조 지지에 관한 미국 국내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크게 이념적, 물질적,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이념적 요인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은 원조 부문에 따라 상반된 선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원조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의 개인이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물질적 요인에서는 Paxton·Knack의 다중분석수준 실증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높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3, No. 2, 2012, pp. 171~192.

11) Chong, Alberto and Gradstein Mark,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12) Paxton, Pamela and Knack Stephen, "Individual and country-level factors affecting support for foreign aid."

13) Milner, Helen V. and Tingley Dustin, "Public opinion and foreign aid: A review essay." pp. 389~401.

원조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요인은 민족주의 또는 인종주의와 같은 가치체계로서 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태도가 원조에 대한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연구들은 오랜 기간 원조를 지속해 온 전통적인 공여국 국민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여국 국민의 원조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고 구조적으로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진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조 공여 역사가 짧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우 원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지지가 전통적인 공여국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을 사례로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up>14)</sup>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종교, 정치적 성향과 같은 요인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 인식,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복지 태도, 정부 신뢰 등이 한국인의 원조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원조 지지에는 정부의 역할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제 문제, 복지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수록 대외원조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한편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요인은 전통적인 공여국 국민의 경우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거나, 국내 연구들 간에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sup>16)</sup> 즉, 한국의 사례에서 원조에 대한 선호가 전통적인 공여국의 사례처럼 안정적이거나 구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조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분석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원조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sup>17)</sup> 그러나 최근

14)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pp. 29~56; 구정우 외,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국민태도 결정요인.”, pp. 115~158; 김동훈·윤준영, “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pp. 3~26; 유성훈, “한국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선호 결정 요인: 국가의 책무성 및 국가 자긍심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제46권 2호, 2022, pp. 131~157.

15) 구정우 외, 위의 논문; 김동훈·윤준영, 위의 논문; 유성훈, 위의 논문.

16) 구정우 외, 위의 논문; 김동훈·윤준영, 위의 논문.

17) Chong, Alberto and Gradstein Mark,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pp. 1~13;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구정우 외,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국민태도 결정요인.”; 유성훈, “한국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선호 결정 요인: 국가의 책무성 및 국가 자긍심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성에 대한 집단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분위에서 개인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불평등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원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나 소득 불평등이 원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소득분위, 월평균 소득수준, 전문직 종사 여부, 지니계수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원조 수행 및 증액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반면, 실제로 불평등, 공정성 인식(perception)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원조 지지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둘러싼 주관적 요인들이 원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국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둘러싼 인식이 대외원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심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세계사적 사건 이후 변화된 경제 질서 속에서, 불평등과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공적 재원을 활용하는 원조 정책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인의 원조 태도와 관련이 있는 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하며, 국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분배 공정성 원칙에 대한 인식,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원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1.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ODA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외원조가 공적 재원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원조 재원과 국내적 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 간에 경합이 존재할 수 있다.<sup>18)</sup> 대중들은 국내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sup>19)</sup> 따라서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해외로 자원이 이전되는 ODA에 대한 지지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2021년 ODA 국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ODA에 대한 반대 이유 중 한국이 원조를 제공할 만큼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5.6%이고, 국내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4.5%로 나타났다.<sup>20)</sup> 즉,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전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 이행 사이에 경합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한정된 자원을 국내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ODA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 국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인식과 OD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분배 공정성 원칙에 대한 인식이 ODA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자원 배분의 결과라고 본다면 공정성의 원칙은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 혹은 근거라고 볼 수 있

18) 김석우·박현정, “ODA 정책의 국내 요인: 국내 복지정책과 ODA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1호, 2016, pp. 133~154.

19) Lee, Hak-Seon, “Inequality and US public opinion on foreign aid.” *World Affairs*, Vol. 182, No. 3, 2019, pp. 273~295.

20) 이동열 외, 『2021 ODA 국민인식 조사』, p. 16.

다.<sup>21)</sup> 특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소득집단별 차별적으로 발현함에 따라,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sup>22)</sup> 공정성은 차별이 없는 상태(the absence of discrimination)를 뜻하는 개념으로, 크게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3)</sup>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여하는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서 분배적 공정성의 원칙에 주목한다. 자원 배분과 공정성의 주요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되며 이는 형평(equity), 필요(needs), 평등(equality)이다.<sup>24)</sup> 형평은 능력과 기여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며 필요는 상대적으로 자원을 더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분배를, 마지막으로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국제사회 경제 질서와 빈부격차가 과거 선진국이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취한 이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성 원칙에 대한 선호는 글로벌 차원에서 재분배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sup>25)</sup> 이를 가설로 제시하면, 형평의 원칙보다 필요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강조할수록 빈곤 국가의 복지증진을 위한 ODA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 분배 공정성의 원칙 중 필요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선호는 ODA에 대한 인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1) 장상수 외,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 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22) 박경현 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 870, 2022, pp. 1~12; 박선정·신진옥, “코로나19 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021, pp. 153~189; 김윤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불평등과 국가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제12권 1호, 2022, pp. 251~252.  
 23) 김혜원·손연우, “공정성 원칙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고용·노동영역에서 형평·평등·필요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13권 1호, 2023, pp. 177~216.  
 24) 우명숙·남은영,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제64권 1호, 2021, pp. 201~244.  
 25) Pogge, Thomas,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ambridge: Polity Press, 2002; 박성우,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명화연구』 제24권 1호, 2016, pp. 5~41에서 재인용.

세 번째 가설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과 원조 지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위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적극적인 대외원조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높은 수용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sup>26)</sup> 전통적인 OECD 공여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서도 복지레짐을 활용하여 측정한 국가의 개입 수준이 원조 규모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27)</sup> 공여국의 복지 태도가 대외원조에 대한 태도로 확장된다는 논리를 복지국가에 내재된 사회적 연대와 규범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것이다.<sup>28)</sup>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 수준에서도 국내 복지에 대한 태도가 대외원조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ODA의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의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수록 이러한 태도가 국제적 수준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자원 재분배 문제에도 투사될 가능성이 크다.

*가설 3. 경제적 소득 격차 해소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과 ODA에 대한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

불평등 인식, 공정성 인식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인식과 ODA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2023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sup>29)</sup> 해당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만 69세 사이

26) Lumsdaine, David,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1949-1989*,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Noël, Alain and Thérien Jean-Philippe,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justice: The welfare state and foreign ai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pp. 523~553에서 재인용.

27) Noël, Alain and Thérien Jean-Philippe, Ibid.

28) Noël, Alain and Thérien Jean-Philippe, Ibid.

29) 조사는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IRB 승인번호는 7001988-202304-HR-1858-02이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부문별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패널조사는 2개 부문에 대해 총 279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부문은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불평등, 공정성에 대한 일반 인식, 경제/소득 부문, 교육 부문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건강/의료 부문, 다문화/ODA 부문, 정보/기술 부문 그리고 사회 일반 인식 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공정성 수준에 대한 설문이다. 본 자료는 한국인의 ODA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최신 자료이며, 기존 연구들이 활용한 자료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sup>30)</sup>

조사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한 할당층화추출 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총 4,1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다. 응답자의 구성은 여성이 2,018명(49.21%), 남성이 2,082명(50.78%)으로 성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응답자 701명(17.1%), 30대 726명(17.7%), 40대 892명(21.8%), 50대 952명(23.2%), 60대 829명(20.2%)으로 50대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 거주자 전체 응답자의 약 26.9%(1,102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서울(19%, 780명), 부산(6.4%, 263명) 순으로 나타났다.

### 3.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ODA에 대한 태도는 ODA 공여 자체에 대한 지지와 ODA 증액에 대한 지지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는 ODA의 규범적 측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세금의 확대를 의미할 수 있는 ODA 증액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그 영향 요인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기존 연구들은 ODA에 대한 인식을 보다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ODA 증액에 대한 지지를 핵심적인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sup>31)</sup> 먼저, ODA 정책에 대한 인식은 ‘귀하는 우리나라가

30) 국민의 ODA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활용한 자료는 대체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조사된 자료들이며 응답자 수는 1,000명 내외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ODA 증액에 대한 인식은 ‘현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현재 수준보다 축소해야 한다’(1점) ~ ‘현재 수준에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국민총소득 대비 0.7%)으로 확대해야 한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불평등 인식, 공정성 인식, 정부의 역할 인식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평등 인식은 ‘귀하는 다음 각 영역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제/소득)’ 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특히 최근 심화하는 경제적, 소득 불평등 경향은 글로벌 차원의 변화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부의 재분배인 ODA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평등한 편이다’(1점) ~ ‘매우 평등하다’(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였다. 다음으로 공정성 인식은 분배 공정성의 원칙 중 어떤 원칙을 더욱 강조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형평의 원칙, 필요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 중 귀하가 생각하는 공정성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①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 또는 ‘②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측정하였고, ‘③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의 경우에는 필요의 원칙을, ‘④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세 가지 범주의 명목변수로 재코딩하여 형평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sup>32)</sup> 마지막으로, 정부

31) Chong, Alberto and Gradstein Mark,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pp. 1~13; Paxton, Pamela and Knack Stephen, "Individual and country-level factors affecting support for foreign aid." pp. 171~192;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pp. 29~56.

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5점 척도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ODA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 유무, 정치적 이념 성향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의 수원 경험에 대한 인지 수준 또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한국이 과거 수원국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ODA를 제공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나는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1점) ~ ‘매우 잘 알고 있다’(5점)로 측정하였다. <표 3>은 변수 측정 문항과 조작적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ODA 지지와 ODA 증액은 답변의 순서에 의미가 있는 5점 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변수이다. 종속변수가 이와 같은 순서형 범주 변수일 경우 독립변수와의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LS)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모든 응답자를 포함하는 기본 분석을 실시한 후, 응답자를 특성에 따라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집단을 나누는 기준으로 소득, 세대, 한국의 수원 인지 여부, 정치적 이념 성향을 활용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효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세대 간, 정치

32) 설진배·김혜원, “공정성 인식이 다문화수용성과 역사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6권 2호, 2022, pp. 122~149.

적 성향 간 인식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 간 불평등, 공정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ODA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소득분위 하위 27.56%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저소득 집단으로, 상위 22.85%에 해당하는 응답을 고소득 집단으로 나누었다.<sup>33)</sup> 세대의 경우, 20대, 30대를 청년층으로, 40대, 50대, 60대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의 수원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과 인지하는 집단으로 나누되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인지하는 집단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념 성향의 경우, 보수성향 집단과 진보성향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문항과 변수 조작	비고
종속 변수	OD A 지지	귀하는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매우 동의한다)	5점 척도
	OD A 증액	현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수준보다 축소해야 한다 ②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③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되,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확대해야 한다 ④ 현재 수준에서 OECD 공여국의 평균 수준(국민총소득 대비 0.3%)으로 확대해야 한다 ⑤ 현재 수준에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국민총소득 대비 0.7%)으로 확대해야 한다	
독립 변수	불평등 인식	귀하는 경제/소득 영역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평등하다 ~ ⑤=매우 불평등하다)	명목
	공정	다음중 귀하가 생각하는 공정성에 가장 가까운 것은	

33) 소득수준을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으로 나누기 위한 기준으로 소득분위 상하위 25%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의 응답이 연속형 변수가 아닌 10점 척도의 명목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별 비율이 상하위 25%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집단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저소득 집단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며, 고소득 집단의 경우 700만 원 이상이다.



	성 인식	어떤 것입니까? ①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0 ②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0 ③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1 ④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2	변수
	정부의 역할	귀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매우 동의한다)	5점 척도
통제 변수	한국 수원 인지	귀하는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전혀 모른다 ~ ⑤=매우 잘 알고있다)	5점 척도
	성별	남자=0, 여자=1	더미 변수
	나이	①만20-29세 ②만30-39세 ③만40-49세 ④만50-59세 ⑤만60-69세	5점 척도
	교육 수준	①무학 ②초졸 ③중졸(고등학교 중퇴 포함) ④고졸(대학교 중퇴 포함) ⑤대졸(전문대 포함) ⑥대학원졸업 이상	6점 척도
	소득 수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세전 월 평균 총 수입은 2023년 기준 얼마 정도입니까? ① 월 200만 원 미만 ② 월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③ 월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④ 월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⑤ 월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⑥ 월 6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⑦ 월 7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⑧ 월 8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⑨ 월 9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⑩ 월 1,000만 원 이상	10점 척도
	종교 유무	무교=0,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1	더미 변수
	이념 성향	①=보수적 ~ ⑦=진보적	7점 척도

#### IV.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한국인의 불평등, 공정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ODA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회귀분석에 앞서 기술통계와 문항별 응답 비율을 통해 분석 대상의 패턴을 간략히 살펴본다. <표 2>는 기술통계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3>은 주요 변수의 응답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된 ODA 지지와 ODA 증액 지지 변수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3.346점과 2.716점이다. 이를 통해 증액에 대한 지지가 ODA 공여 자체에 대한 지지보다는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조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설문한 기존 조사 결과들에서도 ODA 증액에 대한 태도에 비해 ODA 공여 자체를 지지하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ODA가 개념적으로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ODA 제공 자체에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이러한 측면에서 ODA 지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분석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였다.<sup>3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DA 공여 자체에 대한 태도와 ODA 증액에 대한 태도를 모두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종속변수의 구체적인 항목별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ODA 지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을 포함한 찬성 비율은 약 84.83%로, 반대 15.17%에 비해 매우 높다. ODA 증액에 대한 태도의 경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61.29%이며 현상 유지 또는 축소를 지지하는 응답 비율이 약 38.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한 「2021년 ODA 국

34)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pp. 29-56.

35) Chong, Alberto and Gradstein Mark,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pp. 1-13; Paxton, Pamela and Knack Stephen, “Individual and country-level factors affecting support for foreign aid.” pp. 171-192.

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매우 찬성+약간 찬성)으로 응답한 비율이 76%, 반대(매우 반대+약간 반대)로 응답한 비율이 24%로 나타나 ODA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약속한 수준(국민총소득 대비 0.2%)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12.6%, ‘국제사회 권고 기준(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1.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도 ODA 증액 태도에 대한 응답 중 ‘OECD 공여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10.02%,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2.93%로 나타나 기존 조사 결과와 일관된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독립변수인 불평등 인식의 경우,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6%였으며,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보통이라는 인식하는 비율은 24.15%, 매우 불평등하다는 인식 비율은 18.71%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율(‘매우 평등하다’와 ‘평등한 편이다’의 합)은 약 7.68%에 그쳤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평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 즉 공정성 원칙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88%가 형평의 원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민이 기여와 능력에 비례하는 보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서 필요에 기반한 분배에 동의하는 비율이 약 23.32%,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16.8%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책임이 정

부에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약 42.9%가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5.98%는 정부의 책임에 매우 동의하였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lt;표 2&gt; 기술통계값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ODA지지	4,100	3.346098	.8939753	1	5	
ODA증액	4,100	2.716829	.8300643	1	5	
불평등 인식	4,100	3.787805	.8436422	1	5	
공정성 인식	형평	4,100	.5987805	.4902051	0	1
	필요	4,100	.2331707	.4229016	0	1
	평등	4,100	.1680488	.3739552	0	1
정부의 역할	4,100	3.593659	.9576333	1	5	
한국 수원 인지	4,100	3.536585	1.093072	1	5	
성별	4,100	.4921951	.5000001	0	1	
나이	4,100	3.117561	1.37426	1	5	
교육수준	4,100	4.864878	.6039519	1	6	
소득수준	4,100	4.490244	2.613167	1	10	
종교유무	4,100	.4497561	.4975298	0	1	
이념성향	4,100	4.020244	1.230986	1	7	

<표 3> 주요 변수의 응답 항목별 응답 비율

구분	변수	응답 항목별 응답 비율(단위: %)					합계
중속 변수	ODA 지지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0%
		4.34	10.83	35.49	44.56	4.78	
중속 변수	ODA 증액	①축소	②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③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확대	④OECD 공여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	⑤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	100%
		5.49	33.22	48.34	10.02	2.93	
독립 변수	불평등 인식	①매우 평등하다	②평등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불평등한 편이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100%
		0.41	7.27	24.15	49.46	18.71	
	공정성 인식	형평		필요		평등	100%
		59.88		23.32		16.8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0%
		2.32	10.85	27.95	42.9	15.98	

<표 4>는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ODA 증액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ODA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반면,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ODA 공여 그 자체에 대한 태도 사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첫 번째 가설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규범적 성격이 강한 ODA 지지에 있어서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내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대외원조를 위해 해외로 더 많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한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36) Lee, Hak Seon, "Inequality and US public opinion on foreign aid." pp. 273~295.

공정성 원칙에 대한 인식에서는 형평의 원칙보다 필요의 원칙을 강조할수록 ODA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요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ODA 공여 자체뿐만 아니라 ODA 증액을 지지하는 태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부의 재분배가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기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동의할수록 ODA 지지와 ODA 증액 지지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이 채택되었다. OECD 공여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국가의 복지정책 개입 수준이 원조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고, 이는 복지국가를 통해 내재된 사회적 연대와 규범이 국제사회로 투사(projection)된다는 논리로 설명되었다.<sup>37)</sup> 기존 국내 연구 역시 국내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ODA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규범의 외재화를 시사한 바 있다.<sup>38)</sup> 이러한 점에서 국내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수록 국제사회에서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 자원이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서 국민이 인식하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정부의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는지, 분배 기준을 설정하고 분배 과정의 공정성을 규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르딕 국가들과 같이 내재화된 복지 규범이 국제적으로 투사된 것으로 해석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sup>39)</sup>

37) Noël, Alain and Thérien Jean-Philippe,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justice: The welfare state and foreign aid." pp. 523~553

38) 김동훈·윤준영, "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pp. 3~26.

39) 김미경, "ODA 와 노르딕 예외주의: ODA와 복지국가 상관성에 대한 재검토." 『평화연구』 제20권 2호,

한국은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로 전환한 특수한 사례이다. 따라서 한국의 수원 경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ODA 수행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40)</sup> 분석 결과, 한국의 ODA 수원 경험에 대한 높은 인지도는 ODA 공여 및 증액에 대한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ODA 제공이 과거 한국의 원조 수혜에 대한 보답의 성격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sup>41)</sup> 실제로 「2021년 ODA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ODA에 찬성하는 이유로 제시된 6개 응답 항목 중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라는 항목이 28.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수원 경험 인식은 ODA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에 대하여 서구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ODA를 더 지지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었다.<sup>42)</sup>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존 서구 공여국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ODA를 지지하지 않거나 ODA 증액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ODA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이는 한국에서 여성이 갖는 경제적 지위가 선진국의 여성들에 비해 더 낮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기존 연구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sup>43)</sup>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6.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8.5%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28.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4)</sup>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임금 불평등 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ODA 인식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차이가 경제적 불평

2012, pp. 163~201.

40)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pp. 29~56.

41) 박복영 외, 위의 논문.

42) Milner, Helen V. and Tingley Dustin, “Public opinion and foreign aid: A review essay.” pp. 389~401.

43) 김동훈·윤준영, “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pp. 3~26.

44) OECD,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23.11.25.).

등 인식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국 사례에서 여성 집단은 ODA 지지에 경제적 저소득 집단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ODA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지지가 증액에 대한 지지로까지는 이어지는 않았다.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과거 수원국이었던 역사적 경험과도 관련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원조 수원과 관련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이 직접적 체험이 아니더라도 간접 경험을 통한 인지도가 높을 수 있다.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국의 수원 경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경쟁과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집단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문제 해결이 아닌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자원 투입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일 수 있다.<sup>45)</sup>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ODA 지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ODA 증액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치적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ODA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타적 행위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성이 있고, 경제적 이슈에 있어 공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대외원조에 대한 자원 투입에 찬성할 확률이 높다.<sup>46)</sup> 또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개인이 보수적인 성향의 개

45) 김동훈·윤준영, “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pp. 3~26.

46) Chong, Alberto and Gradstein Mark,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pp. 1~13; Paxton, Pamela and Knack Stephen, “Individual and country-level factors affecting support for foreign aid.” pp. 171~192; Milner, Helen V. and Tingley Dustin, “Public opinion and foreign aid: A review essay.” pp. 389~401; 구경우 외,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국민태도 결정요인.” pp. 115~158.



인에 비해 ODA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점 역시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복지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의 차이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도 동일하게 투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47)</sup>

<표 4> 전체 분석 결과

		(1) ODA 지지	(2) ODA 증액 지지
불평등 인식		0.00751 (0.20)	-0.115*** (-3.05)
공정성 인식	필요	0.336*** (4.45)	0.325*** (4.38)
	평등	0.0723 (0.85)	0.0802 (0.95)
정부의 역할		0.157*** (4.56)	0.0751** (2.21)
한국 수원 인지		0.576*** (18.93)	0.175*** (6.01)
성별		-0.0570 (-0.93)	-0.197*** (-3.25)
나이		0.241*** (10.29)	0.000536 (0.02)
교육수준		-0.00571 (-0.11)	0.0903* (1.79)
소득수준		0.00935 (0.79)	0.0263** (2.25)
종교유무		0.213*** (3.39)	0.114* (1.84)
이념성향		0.122*** (4.63)	0.0607** (2.37)
N		4100	4100
Pseudo R2		0.0733	0.0120

주: p<0.1 \*\* p<0.05 \*\*\* p<0.01

47) Chong, Alberto and Gradstein Mark, Ibid; Milner, Helen V. and Tingley Dustin,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aid: American legislators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aid." *Economics & Politics*, Vol. 22, No. 2, 2010, pp. 200~232; Paxton, Pamela and Knack Stephen, Ibid.

본 연구는 전체 응답자를 4가지 기준—소득수준, 연령/세대, 한국의 수원 경험 인지, 정치적 이념 성형—에 따라 각각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4가지 기준은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전체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인구학적 요인들과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활용한 기준이다. 먼저, <표 5>는 소득수준과 연령/세대에 따라 집단을 나눈 후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으로 나누어 ODA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불평등 인식이 소득수준 집단별 ODA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분석에서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ODA 지지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ODA 증액 지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계가 고소득 집단이 아닌 저소득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저소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사적 자본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결과를 완화하기 어려운 집단에서는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을 경합으로 인식하고, 자원의 유출을 반대할 유인이 더 크다.<sup>48)</sup> 더욱이 일반 대중들은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가치 사슬이 국내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sup>49)</sup> 따라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우위에 있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 줄어드는 집단, 즉 저소득 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세계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ODA가 이러한 세계화와 세계 경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ODA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sup>50)</sup>

공정성 원칙에 대한 인식에서는 고소득 집단에서 필요의 원칙에 동의할수록 ODA에 대한 지지와 ODA 증액에 대한 지지가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고소득 집단에서는 전체 분석에서와는 달리 평

48)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pp. 29-56.

49) Lee, Hak Seon, “Inequality and US public opinion on foreign aid.” pp. 273-295.

50) Tingley, Dustin, “Donors and domestic politics: Political influences on foreign aid effort.”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50, No. 1, 2010, pp. 40-49; Lee, Hak Seon, *Ibid.*

등의 원칙 역시 ODA 증액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ODA를 지지한다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었다.<sup>51)</sup> 먼저,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은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종사하거나 자본을 많이 소유한 계층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세계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즉, 원조를 통해 수출, 투자 확대, 자본 유입 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ODA를 지지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sup>52)</sup> 두 번째로는 부유한 계층에서 국제 규범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교육을 접하기 때문에 국수주의적 성향이 낮고 이타주의 등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sup>53)</sup>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례에서 첫 번째 설명을 통한 해석이 더 적절함을 제시한 바 있다.<sup>54)</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공정성 원칙에 대한 인식이 ODA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더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ODA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점은 소득수준과 이타주의의 관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별 분석 결과에서 20대·30대 청년 집단에서 국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ODA 증액을 반대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인구 부양 부담이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 고용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는 중장년층에 비해 높을 수 있다. 즉, 국내 사회 안정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대외 정책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인식이 청년층에서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51)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pp. 29~56.

52) Milner, Helen V. and Tingley Dustin,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aid: American legislators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aid.” pp. 200~232.

53) Hainmueller, Jens & Hiscox Michael, “Learning to love globalization: Education and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2, 2006, pp. 469~498.

54)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pp. 29~56.

<표 7>은 한국의 과거 수원 경험 인지 여부와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른 집단별 분석 결과로 공정성 원칙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ODA 지지 사이의 관계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평등 인식이 ODA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인식할수록 ODA에 부정적인 태도를 ODA 공여 자체와 증액 모두에 대해 명확하게 보인다. 이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한국의 원조 수혜와 원조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념 성향별 분석 결과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ODA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집단에서는 국내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ODA 수행을 찬성하는 반면, 보수적 성향의 집단에서는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ODA 증액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별 분석 결과 1 : 소득수준, 세대

		저소득 집단		고소득 집단		청년 집단		중장년 집단	
		ODA 지지	ODA 증액 지지	ODA 지지	ODA 증액 지지	ODA 지지	ODA 증액 지지	ODA 지지	ODA 증액 지지
불평등 인식		0.0713 (0.94)	-0.175** (-2.29)	-0.0604 (-0.77)	-0.0560 (-0.73)	-0.0221 (-0.36)	-0.194*** (-3.10)	0.0193 (0.39)	-0.0759 (-1.59)
공정성 인식	필요	0.0677 (0.49)	0.203 (1.48)	0.331** (2.07)	0.412*** (2.62)	0.313** (2.53)	0.312** (2.52)	0.278*** (2.90)	0.298*** (3.20)
	평등	0.0558 (0.37)	-0.0985 (-0.64)	0.0748 (0.36)	0.405** (1.97)	0.118 (0.83)	0.0742 (0.51)	0.0426 (0.40)	0.0639 (0.61)
정부의 역할		0.158** (2.32)	0.0184 (0.27)	0.166** (2.42)	0.0893 (1.30)	0.188*** (3.54)	0.0924* (1.74)	0.125*** (2.74)	0.0509 (1.15)
한국 수원 인지		0.478*** (8.35)	0.221*** (3.99)	0.612*** (9.51)	0.0580 (0.94)	0.512*** (11.04)	0.126*** (2.85)	0.671*** (16.64)	0.230*** (6.00)
성별		-0.0242 (-0.21)	0.0319 (0.28)	0.0858 (0.65)	-0.139 (-1.07)	0.255** (2.42)	0.0617 (0.59)	-0.229*** (-2.94)	-0.351*** (-4.61)
나이		0.188*** (4.42)	-0.0176 (-0.42)	0.237*** (4.63)	0.0483 (0.96)				
교육수준		-0.0370 (-0.41)	0.0998 (1.14)	-0.0359 (-0.31)	0.0936 (0.81)	-0.0343 (-0.36)	0.0715 (0.76)	-0.0601 (-0.94)	0.0703 (1.15)
소득수준						-0.00623 (-0.33)	0.0284 (1.50)	0.0103 (0.67)	0.0245 (1.64)
종교유무		0.404*** (3.36)	0.0490 (0.41)	0.162 (1.22)	0.0691 (0.53)	0.349*** (3.24)	0.177 (1.63)	0.220*** (2.85)	0.111 (1.47)
이념성향		0.107** (2.10)	0.0692 (1.38)	0.133** (2.37)	0.0617 (1.13)	0.111** (2.39)	0.111** (2.43)	0.100*** (3.09)	0.0299 (0.96)
N		1130	1130	937	937	1427	1427	2673	2673
Pseudo R2		0.0600	0.0113	0.0742	0.0092	0.0475	0.0115	0.0614	0.0160

주: p<0.1 \*\* p<0.05 \*\*\* p<0.01

<표 6> 집단별 분석 결과 2 : 한국의 수원 인지 여부, 정치적 이념 성향

		한국의 수원 경험 잘 모름		한국의 수원 경험 알고 있음		보수적 정치 이념 성향		진보적 정치 이념 성향	
		ODA 지지	ODA 증액 지지	ODA 지지	ODA 증액 지지	ODA 지지	ODA 증액 지지	ODA 지지	ODA 증액 지지
불평등 인식		-0.176*** (-2.77)	-0.221*** (-3.49)	0.0756 (1.55)	-0.0554 (-1.16)	-0.130** (-1.99)	-0.137** (-2.12)	0.198** (2.39)	0.0257 (0.32)
공정성 인식	필요	0.418*** (3.37)	0.221* (1.80)	0.299*** (3.10)	0.392*** (4.17)	0.466*** (3.07)	0.300** (2.03)	0.357*** (2.61)	0.620*** (4.64)
	평등	0.157 (1.24)	0.0551 (0.44)	-0.0219 (-0.19)	0.0446 (0.39)	0.176 (0.94)	-0.0228 (-0.12)	0.304* (1.89)	0.351** (2.24)
정부의 역할		0.212*** (3.77)	0.0739 (1.32)	0.107** (2.41)	0.0622 (1.44)	0.210*** (3.44)	0.0690 (1.16)	0.193*** (2.72)	0.0577 (0.83)
한국 수원 인지						0.465*** (7.83)	0.173*** (2.95)	0.575*** (9.96)	0.180*** (3.22)
성별		-0.0473 (-0.48)	-0.0887 (-0.92)	-0.203** (-2.56)	-0.313*** (-4.04)	0.0307 (0.26)	-0.176 (-1.49)	-0.275** (-2.28)	-0.270** (-2.32)
나이		0.249*** (6.50)	-0.0811** (-2.16)	0.266*** (8.92)	0.0640** (2.20)	0.240*** (5.68)	0.0543 (1.31)	0.249*** (5.23)	-0.0404 (-0.89)
교육수준		-0.221*** (-2.60)	-0.0886 (-1.07)	0.129* (1.91)	0.204*** (3.15)	-0.0201 (-0.21)	0.0866 (0.96)	0.104 (0.97)	0.222** (2.19)
소득수준		0.00522 (0.27)	0.0522*** (2.71)	0.0115 (0.76)	0.0146 (0.98)	0.00629 (0.28)	0.0124 (0.56)	0.0121 (0.54)	0.0410* (1.88)
종교유무		0.260*** (2.59)	0.147 (1.47)	0.208** (2.54)	0.104 (1.30)	0.398*** (3.27)	0.145 (1.21)	0.160 (1.32)	-0.0712 (-0.61)
이념성향		0.0703 (1.51)	0.0690 (1.53)	0.137*** (4.19)	0.0543* (1.71)				
N		1571	1571	2529	2529	1120	1120	1158	1158
Pseudo R2		0.0268	0.0082	0.0283	0.0106	0.0649	0.0125	0.0808	0.0206

주: p<0.1 \*\* p<0.05 \*\*\* p<0.01

## V. 결론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0번째 목표는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감소(reducing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이다. 불평등을 감소하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 불평등과 국가 간 불평등을 모두 악화시켰다. UN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 30년 동안에 있어서 국가 간 불평등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sup>55)</sup>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 불평등은 심화하였고 그 심화 경향 또한 가속화되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sup>56)</sup> 이렇게 대내외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맥락에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의 자원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와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소득분배에 관한 한국인의 입장이 국제적 차원에서의 소득분배에 대한 입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와 소득 불평등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ODA 증액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ODA 공여 자체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여에 따른 분배나 모두에게 평등한 분배보다 필요에 기반한 분배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ODA 공여 자체와 ODA 증액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과 ODA 제공 및 증액 태도 사이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 연령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와 연령대가 낮고 정치적 지향이 보수적인 경우,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ODA 증액에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수원국으로서

55) UN,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https://sdgs.un.org/goals/goal10>(검색일: 2023.12.14.).

56) 류이근,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 『한겨레』 2023년 4월 10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검색일: 2023.12.14.).

의 한국의 과거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의 경우, 불평등 인식이 강할수록 ODA 공여 자체와 증액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ODA 증액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필요에 의한 분배를 공정성으로 인식할 때 ODA 전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ODA에 대한 지지, 특히 ODA 증액보다는 제공 자체에 대한 지지와 긍정적으로 연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 공정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ODA에 대한 태도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강조된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유무, 이념성향 등의 변수와 원조 제공과 증액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불평등이나 공정성, 정부 역할이 아닌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원조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로 연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2023년 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공정성, 정부의 역할 인식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추후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보다 정직한 측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정성 인식에 대한 변수를 하나의 문항을 통해 명목 변수로 측정하였으나, 하나의 문항에서 획득한 각각의 응답을 상호 독립된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원조 정책이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원조 배분 자체는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일반 대중들의 원조 지지는 선거, 여론 등 다양한 경로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완화될 가능성이 낮고, 원조 규모가 확대되는 맥락에서 ODA 증액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원조 증



액을 위해서는 국내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SDGs 10번 목표인 불평등 감소를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노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원조 수원국이었던 한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시민교육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요구액 기준].”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년 6월.
- 구정우 외,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국민태도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52권 2호, 2018.
- 김동훈·윤준영, “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2호, 2019.
- 김미경, “ODA 와 노르딕 예외주의: ODA와 복지국가 상관성에 대한 재검토.” 『평화연구』 제20권 2호, 2012.
- 김석우·박현정, “ODA 정책의 국내 요인: 국내 복지정책과 ODA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1호, 2016.
- 김윤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불평등과 국가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제12권 1호, 2022.
- 김은미,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전략.”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Vol. 6, No. 1, 2011.
- 김혜원·손연우, “공정성 원칙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고용·노동영역에서 형평·평등·필요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13권 1호, 2023.
- 박경현 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 870, 2022.
- 박복영 외,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경제발전연구』 제21권 3호, 2015.
- 박선경·신진욱, “코로나19 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021.
- 박성우,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평화연구』 제24권 1호, 2016.
- 설진배·김혜원, “공정성 인식이 다문화수용성과 역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6권 2호, 2022.
- 송상훈,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제 2021-9호, 2021.
- 우명숙·남은영,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시아연구』 제64권 1호, 2021.
- 유성훈, “한국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선호 결정 요인: 국가의 책무성 및 국가 자긍심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제46권 2호, 2022.
- 이동열 외, 『2021 ODA 국민인식 조사』 국무조정실, 2021.

- 이재완, “우리 국민들의 대외원조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정책 인지도와 정책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3호, 2019.
- 장상수 외,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 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 정현주 외, “지역체제 수준에서의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학논총』 제35권, 2022.
- Chong, Alberto and Gradstein Mark, “What determines foreign aid? The donors'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7, No. 1, 2008.
- Hainmueller, Jens and Hiscox Michael, “Learning to love globalization: Education and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2, 2006.
- Hewitt, Adrian, “Beyond Poverty? The New UK Policy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Globalisation [Review of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lobalisation Work for the Poor.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22, No. 2, 2001.
- Lee, Hak Seon, “Inequality and US public opinion on foreign aid.” *World Affairs*, Vol. 182, No. 3, 2019.
- Lumsdaine, David,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1949-1989*,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Maizels, Alfred and Nissanke Machiko K., “Motivations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12, No. 9, 1984.
- McKinlay, Robert D. and Little Richard, “A foreign policy model of US bilateral aid allocation.” *World Politics*, Vol. 30, No. 1, 1977.
- Milner, Helen V. and Tingley Dustin,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aid: American legislators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aid.” *Economics & Politics*, Vol. 22, No. 2, 2010.
- \_\_\_\_\_, “Public opinion and foreign aid: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9, No. 3, 2013.
- Noël, Alain and Thérien Jean-Philippe,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justice: The welfare state and foreign ai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 Paxton, Pamela and Knack Stephen, “Individual and country-level factors affecting support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3, No. 2, 2012.
- Pogge, Thomas,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ambridge: Polity Press, 2002.

Tingley, Dustin, "Donors and domestic politics: Political influences on foreign aid effort."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50, No. 1, 2010.

## Abstract

Why do Koreans Support Foreign Aid?: Perceptions of Inequality, Fairness, and the Government's Role and Support for Foreign Aid

Eun Mi Kim(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Gi Yeong Beon(Ph.D. Candidate, Department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Heon Joo Jung(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among Korean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growing social tens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erceptions of inequality, fairnes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link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provision and budget expansion. For empirical analyses, ordinal logistical regression analysis is employed to test hypotheses, utilizing data from 2023 Inequality and Fairness National Awareness Panel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ion of exacerbating domestic inequality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expansion while the former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upport for foreign aid provision. Meanwhile, it finds that those who regard need-based distribution as fair are supportive of foreign aid.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active role in ensuring fair distribution and reducing income disparities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ts provision of foreign aid and expansion. Additional analyses reveal that lower-income, younger, more conservative, and more equality-sensitive respondents are likely to oppose foreign aid expansion. This study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aid by empirically analyzing factors associated with support for it.

Keywords: OD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ublic Support for Foreign Aid, Perceptions of Inequality, Fairness, Government's Role

투고일: 2024년 1월 12일, 심사일: 2024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6일